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자료</h1>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
	배포일시	2019. 10. 4(금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	담당자	• 사무국장 김종학, 서기관 이성주, 사무관 이재훈 • ☎ (044) 201-5347
보도일시		2019년 10월 7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6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중토위, 충실한 공익성 검증을 위해 인력 늘린다 연초부터 행안부·기재부 등 관계 부처 협의 통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보강기로

-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(위원장 김현미, 이하 '중토위')는 토지수용사업의 충실한 공익성 검증을 위해 담당 인력을 늘릴 계획이다.
- 작년 말 국회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'토지보상법')을 개정('18.12.31., '19.7.1. 시행)하여
 - 중토위가 토지수용사업의 신설, 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관계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,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 하려는 행정기관은 미리 중토위와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였다.
 - 이와 같은 토지보상법 개정은 입법과 사업 시행 각 단계에서 토지수용사업의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토지수용을 막겠다는 취지이다.
-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중토위의 공익성 검증기능이 추가되면서, 중토위는 충실한 공익성 검토를 위해 인력증원을 추진하고 있다.
 - 현재 중토위는 공무원 3명이 연간 3,000건에 달하는 공익성 검토와 토지수용사업에 대한 개선요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와 부실한 공익성 검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.

- 이에 중토위는 올해 초부터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 인력 증원에 관한 협의를 추진하여 최종 5명을 증원하기로 하였다. 빠르면 내년 초부터 공익성 검토 및 토지수용사업 개선요구를 위한 인력이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.
- 중토위는 인력이 증원될 경우 현재 1개인 공익심사팀을 2개로 늘리는 한편, 기존의 서류검토 위주의 공익성 검토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조사,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공익성 검토의 현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.
- 중토위 김종학 사무국장은 “이번 인력증원으로 토지수용사업에 대한 공익성 검증이 한층 충실해져 불필요한 토지수용이 억제되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재훈 사무관(☎ 044-201-534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